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8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2. 산업활동
3. 민간소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수출입
7. 국제수지
8. 물가
9. 통화·금융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2. 세계교역
3. 국제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제3장 하반기 및 연간 경제전망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제4장 최근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문제의 제기
2. 노동부문
3. 금융부문
4. 기업구조조정 정책
5. 노동부문
6. 재정 및 공공부문
7. 대외부문

<부록>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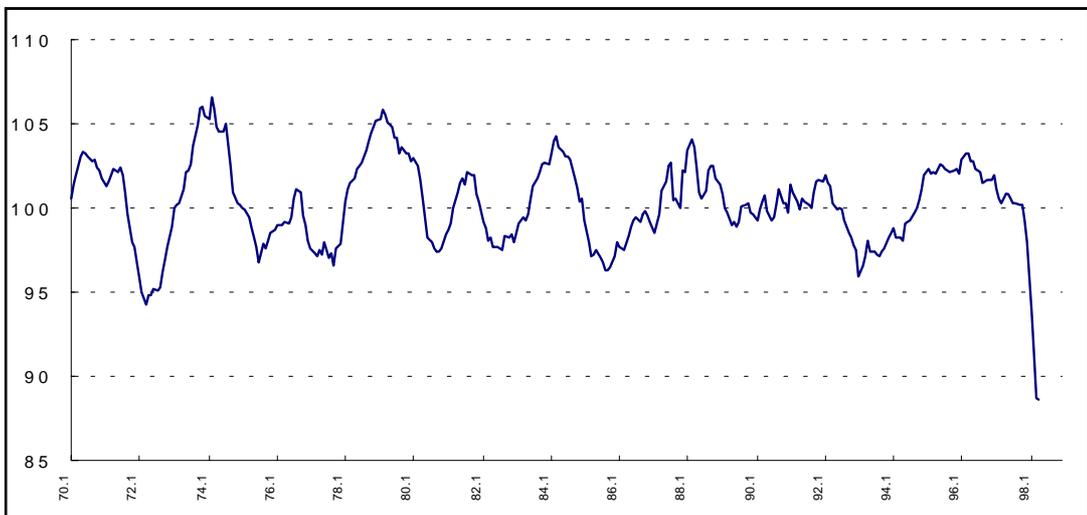
제 1장

국내경제

1. 경기

- 극심한 내수침체, 구조조정에 대한 불투명성, 인도네시아 정정불안, 엔화약세,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어두워지면서 실물부문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1/4분기 실질GDP가 큰 폭(3.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작년 4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전년동월에 비해 12.1% 낮은 수준을 보이며 70년 이래 최저의 수치 기록 .
- 선행종합지수는 4월중 전월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에 따른 상대적 효과임.

<그림 1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내수부진이 가속화로 반도체, 선박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조업을 단축하면서 가동률이 급감하고 실업이 급증.
- 4월중에 평균가동률이 전월(65.4%)보다 높은 68.3%로 나타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실업률은 4월에 6.7%로 급증, 실업인구가 143만명을 넘어섬.

<표 1> 최근 가동률 및 실업률 동향

(%)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평균가동률	81.8	79.8	81.1	80.6	78.0	79.9	67.3	68.3
실업자(천명)	425	646	550	470	561	556	1,182	1,434
실업률	2.0	3.1	2.5	2.2	2.6	2.6	5.7	6.7
(계절조정)	2.0	2.5	2.6	2.4	2.8	2.6	4.7	6.1

자료: 통계청

2. 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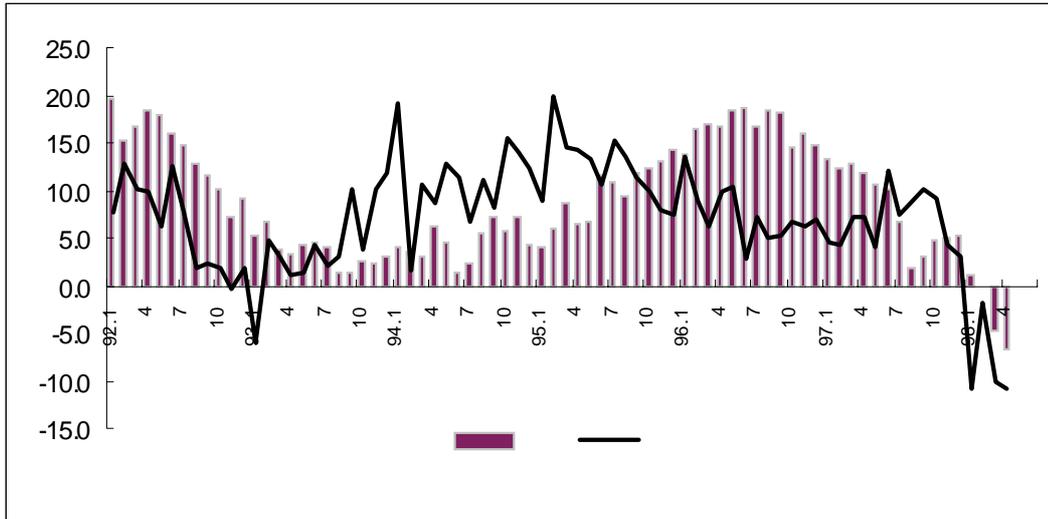
- 내수침체로 산업생산이 10.8%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가 가속화됨.

○ 수출물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반도체, 선박, 담배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0.8% 감소.

○ 출하는 내수출하가 담배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여 11.6% 감소

○ 재고의 경우, 6.6%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월 이후 연속 3개월 감소추세.

<그림 2> 산업생산과 재고추이



- 부문별로는 반도체, 선박, 제 1차금속 등 일부품목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거의 전업종에서 내수가 급감함에 따라 중화학공업, 경공업 생산이 모두 부진.
- o 4월중 중화학공업생산은 8.7%, 경공업생산은 19.1%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줌.
- o 내수출하도 26.5% 감소하여 점차 감소속도가 빨라짐.
- o 수출출하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28.3%)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표 2> 최근 생산·출하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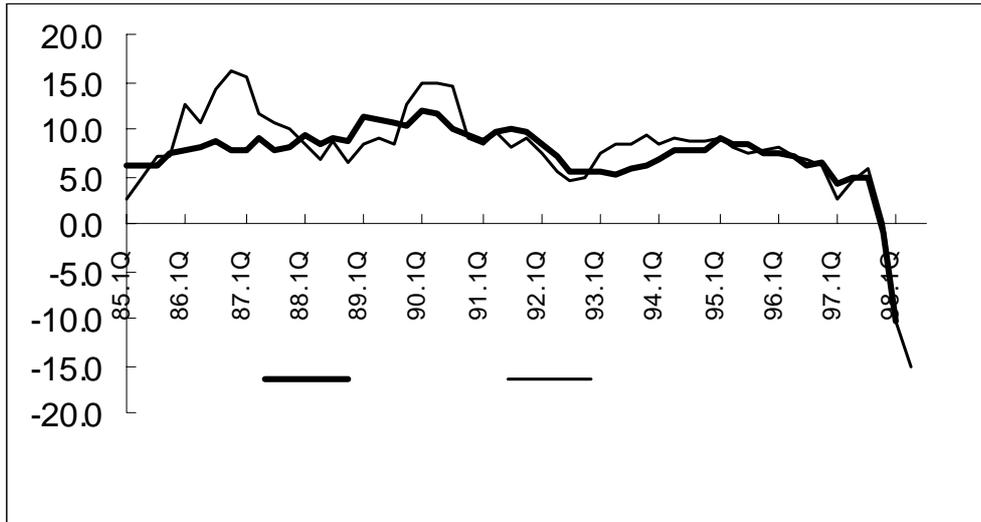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생산	7.3	5.4	7.7	8.8	5.5	6.9	-8.1	-11.1
중화학	10.5	9.3	12.7	13.9	9.2	11.2	-5.5	-8.7
경공업	-1.0	-5.9	-6.2	-5.1	-6.0	-5.8	-16.0	-19.1
출하	7.6	1.6	7.3	8.0	3.2	5.0	-7.8	-11.8
내수	6.9	1.4	4.0	2.6	-3.5	1.0	-22.1	-26.5
수출	9.7	2.4	17.0	23.7	21.3	16.1	30.5	28.3

자료: 통계청

3. 민간소비

- 9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38.5%), 준내구재(-18.0%), 비내구재(-8.2%)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급속히 위축(-10.3%).
- 4월중 도소매판매, 내수용소비재 출하 등 소비관련지표들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2/4분기중 민간소비 감소폭은 1/4분기보다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자산가격하락, 주식시장 침체, 임금하락 등으로 구매력이 상당히 낮아진데다 제 2의 외환위기 , 복합불황의 가시화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데 기인함. 소득감소 이상으로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난 1/4분기 도시가계수지 동향은 이와같은 소비심리 위축현상을 반영하는 것임.

<그림 3> 도소매판매와 내수용소비재출하 추이



- 부문

별로 4월중

- 도매부문이 화합물, 석유석탄 그리고 건축재료 등의 부진으로 12.4% 감소.
- 소매부문은 백화점, 가정용기기 및 장비, 음식료품 종합소매의 부진으로 12.7% 감소
- 자동차·연료부문은 자동차와 부품판매 부진으로 29.9%감소.
-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경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남녀기성복, 등유등) 모두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하여 24.4%감소

<표 3> 최근 소비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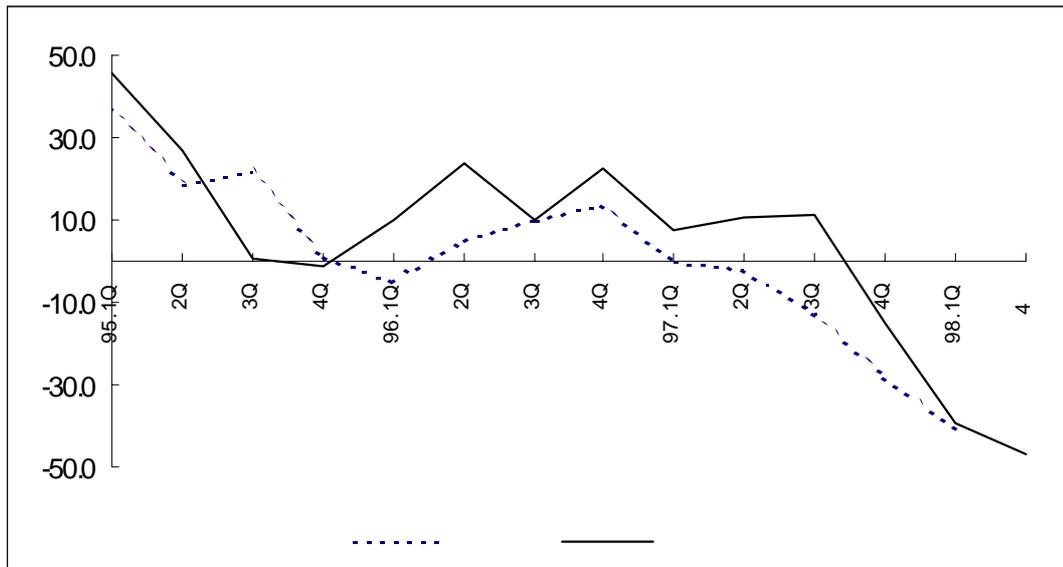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도소매판매	7.0	2.5	4.6	5.7	-0.1	3.2	-10.4	-15.0
도매	4.3	2.8	3.6	4.2	1.9	3.2	-5.9	-12.4
소매	10.4	6.4	6.5	5.6	0.3	4.5	-9.9	-12.7
자동차·연료	8.8	-8.2	3.7	11.2	-9.0	-0.7	-29.7	-29.9
내수용소비재출하	5.9	-3.5	-0.7	2.7	-4.3	-1.5	-19.7	-24.4
내구재	5.9	-3.5	10.9	16.4	-2.5	5.0	-25.7	-32.7
비내구재	5.9	-3.4	-5.8	-3.1	-5.2	-4.4	-17.1	-19.8
민간소비	6.8	4.2	4.8	4.8	-1.0	3.1	-10.3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4. 설비투자

- 9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39.7%)와 트럭, 승용차, 항공기 등 운수장비(-44.9%)에 대한 투자가 모두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40.7% 감소.

<그림 4> 설비투자와 국내기계수주 추이



- 4월중에도 국내기계수주등 설비투자관련 지표들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설비투자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적 성격을 지닌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발주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7.0% 감소, 3월에 이어 50%에 전후의 감소세 유지.
 - 기계류수입액과 기계류내수출하도 각각 54.1%, 42.8%의 대폭 감소.

- 이처럼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고금리, 금융시장의 경색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마비된 상태이고 재정긴축운동에 따른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도 부진한데 기인.

<표 4> 최근 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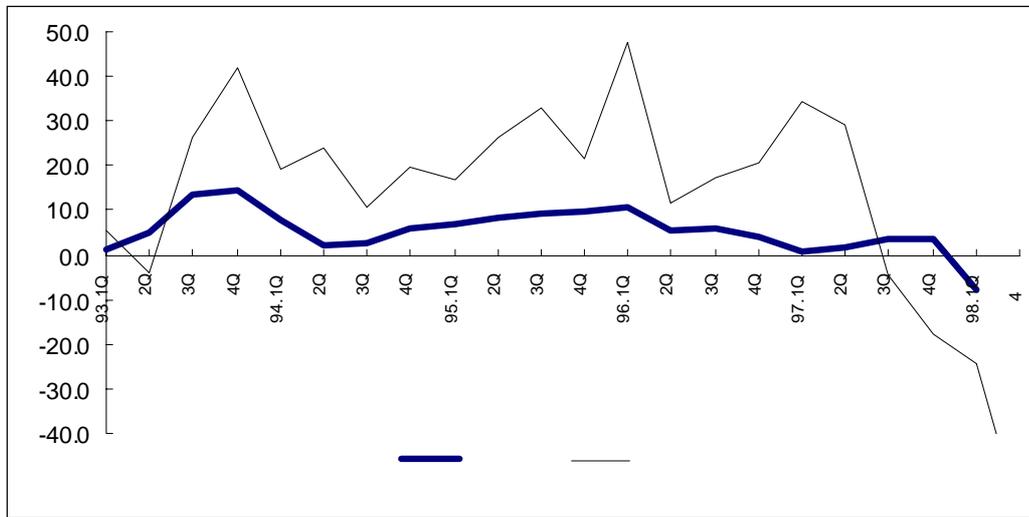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국내기계수주	16.5	7.7	10.4	11.3	-15.2	3.3	-39.3	-47.0
공공	16.0	7.3	4.2	29.7	-35.8	-2.5	-66.5	-71.9
민간	16.6	7.8	11.8	8.6	-9.8	4.6	-31.3	-41.1
기계류수입액	-0.7	-13.9	0.4	-34.6	-38.2	-22.8	-52.9	-54.1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	12.6	4.5	7.4	-6.0	-16.0	0.8	-35.0	-42.8
설비투자	8.3	-0.2	-1.8	-12.7	-28.2	-11.3	-40.7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5. 건설투자

- 9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주택, 공장 등 건물건설의 부진이 이어지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7.7%감소.

<그림 5> 건설투자와 국내건설수주 추이



-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민간부문 발주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발주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4월중 58.6%가 감소하면서 97년 4/4분기 -17.8%, 98년 1/4분기 -24.5%보다 감소세가 크게 확대.
- 주거용(52.6%)을 비롯한 모든 용도의 건축허가면적이 감소..
- 이처럼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 부동산경기 침체지속,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고금리 등으로 민간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재정건축운용에 따른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도 부진한데 기인.

<표 5> 최근 건설투자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국내건설수주	21.4	34.4	29.3	-4.3	-17.8	4.7	-24.5	-58.6
공공	44.7	49.6	9.5	-7.5	-5.0	6.3	-7.9	-64.5
민간	9.1	23.6	18.7	-11.8	-37.3	-6.5	-45.0	-51.8
건축허가면적	-3.0	-3.4	3.6	-15.1	12.1	-0.4	-22.9	-58.1
건설투자	6.1	0.8	1.8	3.8	3.7	2.7	-7.7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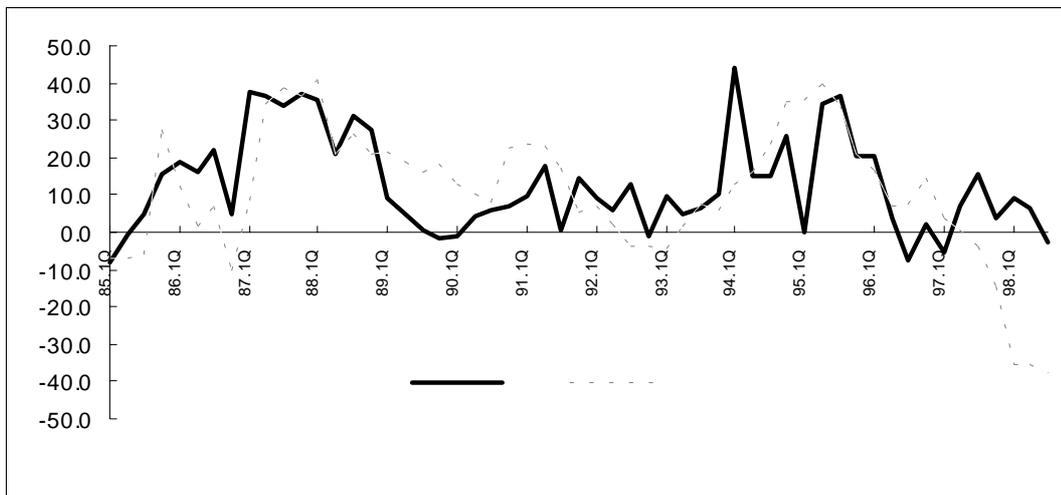
6. 수출입

- 2월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5월중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전체무역규모가 크게 축소됨.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입감소가 지속되어 5월중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1-5월중 161억달러) .
- 금수출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던 수출이 5월중 2.6%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시아시장의 침체, 수출단가하락, 엔화가치 등 경쟁국 통

화의 동반하락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마비, 고금리, 기업부도 증가 등에 의한 수출기반 위축에 기인함.

- 투자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소비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5월중 수입이 76.7억달러로 37.5%감소. 극심한 내수부진외에도 신용경색 지속에 따른 수입L/C개설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

<그림 6> 수출입(통관기준)증가율 추이



- 부문별로는 중화학수출 호조, 경공업수출 부진의 양극화현상 지속.

- 중화학수출(12.7%)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선박, 일반기계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자동차, 가정용전자 등이 여전히 부진.
- 경공업수출(-4.8%)은 섬유제품, 타이어, 튜브이 호조를 보인 반면 직물, 신발 플라스틱제품, 가죽모피등이 부진. 수년간 지속된 구조조정과 최근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급증으로 생산기반자체가 축소된데다 경공업 최대품목인 직물수출이 부진한데 기인.

- 지역별로는

- 미국, 유럽 등 대선진국 수출과 러시아,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내수침체를 겪는 일본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수출 부진이 지속됨.

(대미수출(19.8),대EU수출(5.9),대일본수출(-10.0), 대아세안수출 -16.5%)

<표 6> 최근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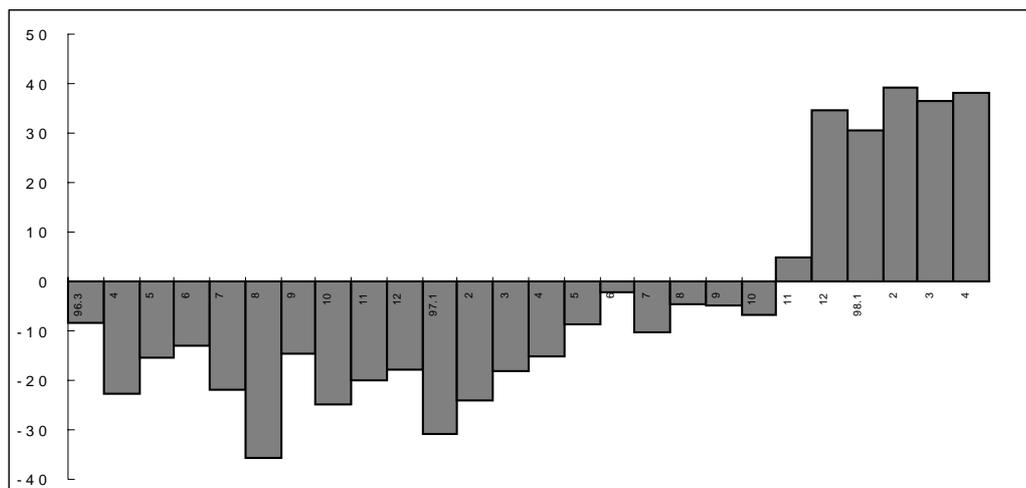
(백만달러,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통관)	136,164	9,018	11,246	12,058	12,150	11,434
증가율	5.0	-0.2	20.1	6.5	6.6	-2.6
중화학제품	5.9	-0.4	15.6	7.6	10.8	12.7
경공업제품	0.6	-14.6	0.5	-6.6	0.2	-4.8
수입(통관)	144,616	7,534	8,008	8,376	8,240	7,670
증가율	-3.8	-39.8	-30.3	-35.8	-35.6	-37.5
원자재	2.2	-36.8	-33.3	-35.2	-32.1	-28.4
자본재	-10.3	-41.9	-23.8	-36.3	-38.0	-33.8
소비재	-7.4	-47.4	-35.7	-37.3	-43.5	-37.4

7. 국제수지

- 4월중에도 경상수지가 큰 흑자를 보임에 따라 4월까지의 흑자규모는 144.2억불을 기록, 전년동기간(88.2억달러 적자)에 비해 232.5억달러 개선.

<그림 7>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추이



- 4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38.1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작년

11월 이후 흑자행진을 이어감.

○ 상품수지는 수출이 소폭(1.5%)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큰 폭(35.6%)으로 감소하여 38.3억달러 흑자.

○ 서비스수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수수료지급 증가로 5백만달러 적자.

○ 소득수지는 2.6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대외이자지급이 감소하여 적자폭이 전월(-4.7억달러)에 비해 축소.

○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의 국내송금으로 2.4억달러 흑자를 보여 4월까지 14.2억달러의 흑자.

- 자본수지는 4월중 26.9억달러 유입초를 기록 순유입규모가 크게 확대.

○ 국내주식시장침체로 주식자금유입이 부진하였으나 40억달러의 외평채 발행으로 외국인투자가 33.1억달러의 유입초.

<표 7> 최근 국제수지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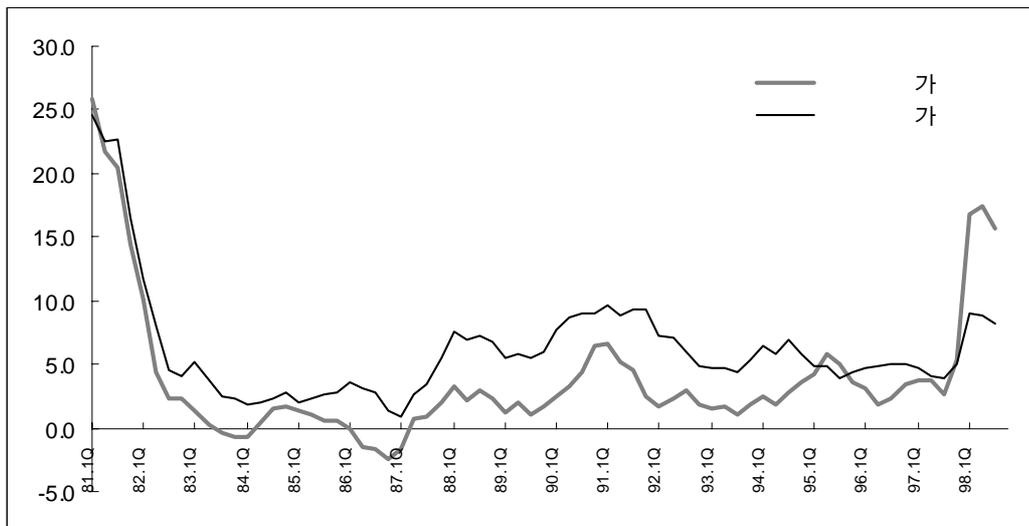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p
경상수지	-230.0	-73.0	-26.0	-19.9	32.7	-86.2	106.9	38.1
상품수지	-149.6	-55.3	-9.0	-1.3	26.8	-38.7	96.7	38.3
서비스수지	-61.8	-12.3	-8.6	-12.2	3.8	-29.3	5.7	-0.1
소득수지	-18.1	-5.0	-8.6	-6.2	-6.9	-26.8	-7.2	-2.6
경상이전수지	-0.5	-0.4	0.1	-0.1	9.0	8.6	11.8	2.4
자본수지	233.3	54.0	68.6	12.8	-81.0	54.4	13.9	26.9
직접투자수지	-23.4	-5.2	-2.3	-6.1	-5.8	-19.5	-4.3	-0.6
증권투자수지	151.8	25.6	57.5	54.6	10.0	147.6	43.0	38.2

자료: 한국은행

8. 물가

- 2월을 정점으로 하는 물가상승률 둔화추세가 2/4분기에도 이어짐.
- 소비자물가는 4월, 5월중 각각 전년동월대비 8.8%, 8.2%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연속 3개월 하락.
- 생산자물가는 4월중, 5월중 각각 전년동월대비 17.5%, 15.6% 증가.
- 이처럼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해 가는 이유는
 - 환율이 안정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공산품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

<그림 8 > 물가상승률 추이



- 5월중 소비자물가를 부문별로 보면

- 환율하락, 국제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전월비 1.1%% 하락하였으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수요감소로 집세, 개인서비스부문의 지수가 하락.
- 반면 공공요금은 투약 및 주사료, 일부 지방택시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1%상승. 5월까지 가장 높은 전년말월비 증가율을 보임.

<표 8> 최근 물가 추이

(전년동기비,%)

	1997년	1998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4.5	8.3(2.4)	9.5(1.7)	9.0(-0.2)	8.8(0.3)	8.2(-0.5)
농축수산물	3.8	6.0(1.5)	4.9(0.7)	5.9(0.5)	5.3(1.3)	6.4(0.3)
공산품	4.3	11.5(3.5)	14.4(2.9)	12.5(-1.8)	13.0(0.4)	11.9(-1.1)
공공요금	5.1	8.2(2.6)	10.2(1.9)	11.2(1.7)	11.3(0.2)	10.6(0.1)
개인서비스	5.3	7.9(2.5)	8.1(0.8)	7.3(0.7)	6.6(-0.2)	5.9(-0.4)
생산자물가	3.8	15.2(4.9)	17.7(2.8)	17.5(-0.3)	17.5(19.7)	15.7(-1.6)
농림수산물	1.6	2.8(3.0)	0.8(0.7)	2.6(0.8)	2.7(1.1)	1.0(-1.0)
공산품	4.2	17.0(5.2)	20.3(2.5)	19.9(-0.5)	19.9(0.3)	17.9(-1.7)
전력, 수도 및 가스	4.6	16.7(2.5)	18.7(1.0)	18.0(0.0)	16.6(0.0)	16.6(0.0)

주: ()는 전월비

9. 통화 · 금융

- 금년들어 통화의 긴축적인 운용, 신용경색 등으로 일제히 둔화추세를 보이던 통화지표들이 5월 들어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의 영향으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임.

- 5월중 총통화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 저축성예금의 증가로 전월비 1.8%p 상승한 15.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 MCT 증가율은 은행의 CD발행감소와 금전신탁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0.6p감소한 8.6%의 증가에 그침.
-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으로 보아 총유동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표 9 > 주요통화지표 증가율

(평잔기준,전년동기대비,%)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MCT	21.7	13.3	14.7	15.3	12.7	10.5	9.6	9.2	8.6
본원통화	-12.2	-9.6	-5.7	-15.0	-4.5	-13.4	-4.7	-5.6	-8.6
총통화(M2)	16.2	18.4	21.1	19.2	16.1	14.1	13.9	13.3	15.1
총유동성(M3)	19.0	16.0	15.9	16.3	15.1	15.1	14.4	-	-

자료 : 한국은행

- 금융시장은 인도네시아사태, 국내노동시장의 불안 등으로 콜금리, 회사채수익률 등 장단기금리가 5월 중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5월 하순이후 다시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
- 외환시장은 경상수지 흑자지속, 기업매각자금 유입, 가용외환보유고 확대 등으로 공급우위의 수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엔화약세, 노동시장의 불안,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4월중 13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5월중 1400원대로 올라서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표 11> 최근 환율과 시장금리 추이

	97.11말	97.12말	98.1말	98.2말	98.3말	98.4말	98.5말
원화환율(원/달러)	1,164	1,415	1,573	1,640	1,379	1336	1408
콜금리(1일,%)	12.1	30.1	25.9	23.3	22.0	20.4	16.7
회사채수익률(3년,%)	15.1	29.0	18.5	20.5	18.3	17.7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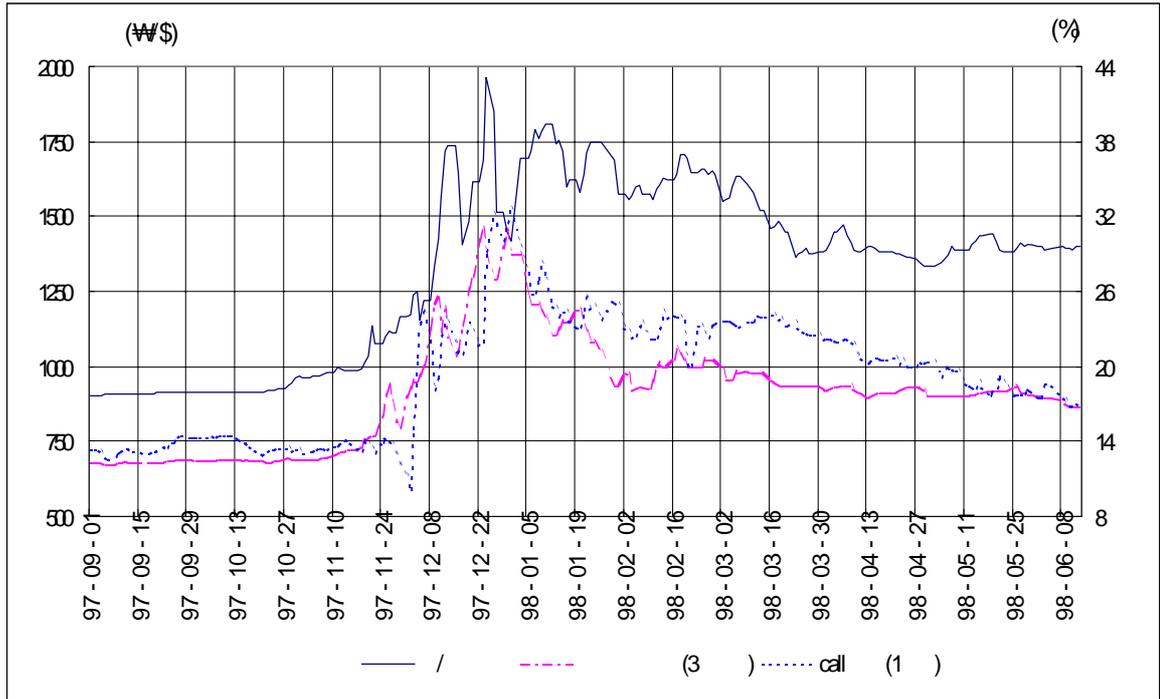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동남아 NDF시장에서의 선물환율(원/\$)은 6월 17일 현재 커다란 동요없음.

<표 12> NDF 선물환율 1998.6.17(09시35분 현재)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선물환율(원/달러)	1,462	1,505	1,540	1,640	1,750

<그림 9> 환율, 회사채수익률, 콜금리 추이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 세계경제는 1997년도 경제성장률이 4%이었음에 비해, 1998년도의 성장률은 3%로 다소 하락이 예상
 -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기인
 - 선진국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
 - 금융위기에 처한 아시아 경제는 97년 경제성장률 6.7%에서 98년도에는 4.4%로 다소 위축되나 99년도에는 다시 5.5%로 회복할 전망
 - 특히, ASEAN-4의 경제성장 둔화 폭이 96년 7.1%, 97년 3.9%, 98년 -2.7%로 매우 큼
 -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만이 98년 7.0%의 높은 성장을 유지할 전망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97년 3.2%에 이어 98년도에는 4.6%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에서 낮은 상대로 유지되며,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아시아 위기로 많은 나라들의 수요 위축
 - 아시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 수요감소로 가격하락
 - 아시아 국가들의 평가절하로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에 기인

<표13> 세계경제전망

	1996	1997	1998	1999
<실질GDP성장률>				
세계	4.1	4.1	3.1	3.7
선진국	2.7	3.0	2.4	2.5
미국	2.8	3.8	2.9	2.2
독일	1.4	2.2	2.5	2.8
프랑스	1.5	2.4	2.9	3.0
영국	2.2	3.3	2.3	2.1
개도국	6.6	5.8	4.1	5.3
아시아	8.3	6.7	4.4	5.9
일본	3.9	0.9	0.0 (0.8)*	1.3
한국	7.1	5.5	-0.8 (-3.0)*	4.1
대만	5.7	6.9	5.0 (4.0)*	5.2
싱가폴	6.9	7.8	3.5 (3.0)*	5.0
태국	5.5	-0.4	-3.1 (-5.0)*	-
말레이시아	8.6	7.8	2.5 (-1.0)*	-
필리핀	5.7	5.1	2.5 (2.0)*	-
중국	9.7	8.8	7.0 (6.0)*	-
인도네시아	8.0	5.0	-5.0 (-7.0)*	-
<교역>				
교역량 신장률	6.6	9.4	6.4	6.1
<단기금리>				
미국	5.6	5.9	6.1	6.1
일본	0.7	0.7	0.7	1.2
독일	3.3	3.4	3.9	4.5

* 98.5.5.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운세미나에서 Citibank of Singapore의 아시아연구소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5

가. 미국

- 미국의 97년 경제성장률은 3.8%이며, 98년도 성장률은 2.9%로 전망
- 미국의 98년 1/4분기중 실질 GDP성장률은 4.8%로 높은 수준을 달성
- 반면, 미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및 달러화 강세에 따라 수출 부진
- 98년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1/4분기중의 재고증가와 무역수지 악화로 전분기에 비해 둔화 예상

<표14>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1996	1997				1998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성장률	2.8	3.8	4.9	3.3	3.1	3.7	4.8
경상수지	-1,487	-1,668	-304	-382	-509	-473	-431
소비자 물가상승률	2.9	2.4	1.6	0.9	1.0	1.9	1.5

나. 일본

- 1998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0%로 전망
- 일본의 98년 1/4분기 GDP성장률이 -1.6%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 96년말과 97년초에 경기회복의 기미가 있었으나 97년 4월 소비세 인상이후 내수위축이 지속
- 주변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따른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화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24일 총 1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표15>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1996	1997					1998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성장률	3.9	0.9	5.7	-11.1	3.1	-0.7	-1.6
경상수지	659	930	168	244	239	279	285
소비자 물가상승률	0.2	1.7	0.6	2.0	2.1	2.1	2.0

다. EU

- 1997년 2.6%의 경제성장률에 이어 98년에도 2.8%의 성장 확대 전망

○독일은 마르크화 약세에 따른 수출호조 지속과 설비 및 건설투자 회복에 힘입어 1/4분기 중 실질 GDP성장률 4.1%달성

○프랑스와 영국은 수출증가세 둔화로 1/4분기 중 실질GDP성장률이 각각 2.4%와 2.0%에 그침

2. 세계교역

- 1998년 교역신장률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97년도의 9.4%보다 낮은 6.4%로 전망

○미국의 경기호조와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미·일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

3. 국제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미 국채 매입세 확대에 따라 전년말에 비해 하락세

<표16> 국제금리

단위 : 년%

	1996	1997	1998				
			1월	2월	3월	4월	5월
미국 재할인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미국 단기재정증권	5.01	5.23	5.04	5.17	4.98	4.87	5.02
미국 장기국채	6.54	5.97	5.81	5.93	5.94	5.94	5.81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0.50
독일 재할인율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자료 : 주간해외경제

- 미달러화는 아시아 통화불안 및 미국경제의 호조 등을 배경으로 강세 지속
- 동남아 금융위기와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개도국 통화가 절하 추세 지속
 - 일본 엔화는 6월11일 미재부장관인 Rubin의 ‘외환시장 협조개입불가’라는 입장 표명에 따라 약세를 지속했으나,
 - 6월17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가 일본 엔화의 환율안정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국면을 보임

<표17> 동남아시아 각국 환율

단위 : US\$

	96.12	97.12	98.3	98.4	98.5	98.6.16
일본(¥)	115.85	130.57	133.22	132.83	138.91	143.33
한국(won)	844.9	1695.0	1383.0	1336.0	1407.0	1430.0
태국(Baht)	25.66	47.00	38.75	38.62	40.15	43.25
인도네시아(Rupiah)	2363	5403	8700	8075	11550	15050
말레이시아(Ringgit)	2.5250	3.8750	3.6356	3.7250	3.8180	4.0375
대만(NT\$)	27.49	32.55	32.80	32.97	33.90	34.61

- 아시아 경기 위축으로 원유가 및 기타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세
 - 미국 WTI 현물유가 기준으로 지난 4월에는 배럴당 15.40\$에서 5월에는 배럴당 15.20\$로 배럴당 0.2\$감소
 - 동가격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부진 지속으로 지난 4월에 비해 하락

○ 원선가격은 미국 최대 생산지인 텍사스주의 고온건조현상 지속 전망으로 다소 상승

<표18> 유가 및 원자재 가격

	1996	1997	1998				
			1월	2월	3월	4월	5월
<현물유가>							
WTI(\$/배럴)	25.95	17.60	17.25	15.45	15.65	15.40	15.20
Dubai(\$/배럴)	21.76	15.21	13.83	11.84	12.17	12.97	12.48
<기타 원자재가격>							
옥수수(센트/부셸)	258.3	265.0	273.0	261.5	259.0	243.8	238.5
소맥(센트/부셸)	381.3	325.8	337.3	327.5	320.3	289.8	284.3
동(\$/MT)	2,275.5	1,712.5	1,731.0	1,687.0	1,752.0	1,846.0	1,686.0
알루미늄(\$/MT)	1,499.0	1,524.0	1,514.0	1,451.0	1,427.5	1,423.0	1,344.0
원선(센트/파운드)	75.2	67.1	66.3	64.7	67.2	63.8	70.6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제 3장

하반기 및 연간경제전망

<요약>

— 하반기이후에도 대내외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대외적으로 아시아통화위기의 여파로 동남아시아의 수요가 크게 줄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 수출시장여건 악화.

○ 최근의 엔화약세 외에도 대만 및 싱가포르 통화가치의 하락, 인민폐절하 가능성의 증대 등, 경쟁국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어 지난 해말 원화가치의 대폭 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개선효과가 상실되고 있음.

○ 대내적으로,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국면의 지속과 수출지원 금융정상화의 지체 등 금융시스템 복원이 지연됨으로써 수출신장 제약.

○ 내수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경기수축과정에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실질소득의 감소와 자산가격하락이 겹침으로써 내수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음.

— 1/4분기(-3.8%)에 이어 2/4분기중에도 -4.9%내외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중에는 금융시스템 정상화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연간성장율은 -4.0%~ -5.7%내외로 전망됨

○ 내수부문의 위축으로 기업의 수출증대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나 하반기중에도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출은 감소세가 예상되며 3분기이후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출증가율은 4%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수출지원노력이 따르는 경우, 하반기이후 수출증가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실업의 증가, 명목임금의 감소 그리고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둔화 그리고 재정지출의 둔화 등으로 내수부문도 고정투자가 23%정도 그리고 소비는 8%내외의 감소가 예상됨.

○ 가계부문 소득증가의 둔화, 기업투자의 감소, 재정지출의 둔화 등으로 내수부문은

9% 내외의 감소 예상

*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는 97년의 11.3%가 감소한데이어 98년중에도 40%이상 감소 예상

— 지연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이후로 넘어가고 도산 및 실업의 증가와 같은 실물부문의 위축효과가 99년 이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 우리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4%내외에 그치고 향후 잠재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는데에는 5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 가능성

○반면, 98년중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수출증대노력에 의한 경상흑자의 대폭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경제는 98년4/4분기이후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여 99년중 성장률은 2%내외에 달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성장 및 고용

- IMF이후 재정 및 금융긴축기조의 유지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의 지속으로 우리 경제는 1/4분기중 -3.8%의 GDP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4.9%내외의 마이너스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하반기에는 금융시스템 복원속도에 따라 성장감소폭이 달라질 것이나 연간성장율은 -4.0~-5.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98년중 예상되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와 총유동성(M3)의 연간공급규모가 13.5%수준에서 묶여 연중 금융긴축상황이 불가피할 전망. 더욱이 상반기중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3/4분기이후로 지연되면서 신용경색국면 지속에 따른 고금리 지속 전망.
 - 내수의 급속한 냉각에 따라 수출중심의 불황타개가 불가피하나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라 수출신장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음. 이는 수출단가의 하락과 수출입금융의 경색에 따른 것임.
 - 98년중 내외수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7-8%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 보면, 원화의 큰 폭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금융상의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한, 98년중 수출 증가율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97년에 이어 4%미만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수부문은 실질가계소득의 감소, 기업투자감소, 재정지출의 둔화로 급격한 위축 예상.
 - 수출의 경우 원화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97년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는 1/4분기중 수출단가의 하락이 품목별로 30%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97년중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타격을 입은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됨에 따른 것임.
 - 소비부문은 경기침체, 고용불안확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임금삭감,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구매력의 감소가 불가피 해짐에 따라 98년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10%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 채산성의 악화, 향후 경기의 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크게 위축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이 겹침에 따라 -37.5%내외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사회간접자본확충관련 예산의 축소에 따라 토목 등 기타건설부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위축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자재 등 건설원가의 인상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투자 전체로는 12%내외의 감소 전망.

2. 물가

- 9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고 있으나 연평균물가상승율은 91년 버블형성기이후 가장 높은 8%대로 예상.
 -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낮아진데다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IMF합의에 따른 긴축기조가 지속됨으로써 하반기중에도 물가상승압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등 원화절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 전반에로 파급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원화가치가 다시 절하되는 경우 물가상승압력은 다소 높아 질 가능성.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 97년 38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98년중 400억불이상의 흑자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는 수입수요의 대폭 감소 예상에 따른 것임.
 - 경기침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98년 수입은 97년대비 27%내외의 감소가 예상됨.
 - 수출은 원화절하의 효과가 경쟁국 환율의 절하로 인해 반감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획기적인 수출확대노력이 없는 한, 수출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상품수지의 대폭 개선과는 달리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추이는 98년중에도 이어질 것이나 10억불 내외의 소폭 적자에 그칠 전망이다. 단기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로 투자수익의 적자가 예상되나 여행수지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무역외수지는 97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98년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대폭흑자예상에 힘입어 4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보다 약 500억달러 개선전망.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연중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서 1/4분기중 18-20%의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2/4분기들어 외환시장의 안정에 따라 다소 낮아지고 있음. 이같은 하향안정세는 하반기중에도 지속되어 시장실세금리가 연말에는 15%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IMF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9%대로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맞게끔 총유동성(M3)을 조절하는 통화긴축정책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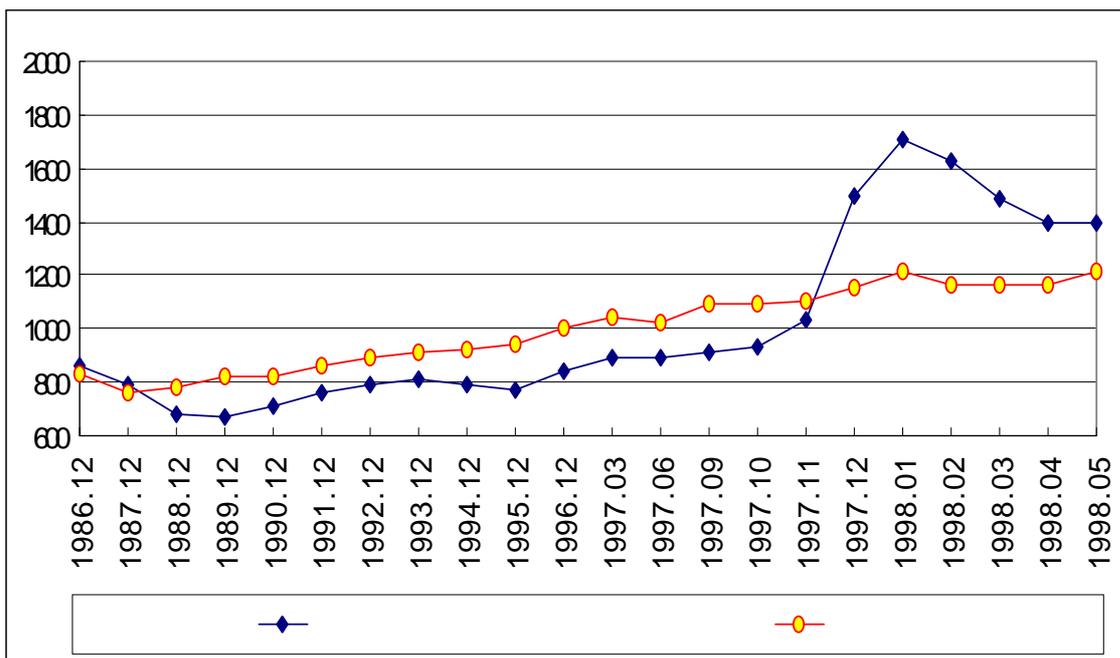
○3/4분기이후 시장금리는 외환시장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한, 15%-17%를 유지할 것이나 환율의 안정적 절상추이에 따라 하반기이후 추가적 금리인하 가능성 있음.

나. 환율

- 3월이후 외환시장은 공급우위로 변하면서 환율은 1400원/\$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에 비추어 원화가치는 다소 절하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절상가능성은 상존함.

○구매력평가에 의한 실질실효환율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원화의 적정환율은 5월말 현재 1,200원/달러 수준을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10> 균형환율과 실제환율 추이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지연, 경상수지의 불안한 흑자지속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외자유입이 지연됨으로써 원화환율의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의 접근은 99년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향후 환율은 외환보유고의 양적 축적보다는 국내의 구조조정과정과 노사 문제와 관련, 개혁의지와 추진방식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의 제고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 원화 환율은 경상수지 개선으로 외화수요압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절상추세를 지속할 가능성.
 -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통해 외화유동성부족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실질실효환율수준으로 조기에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

제 4장

최근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문제의 제기

- IMF금융지원이후, 우리경제는 초기의 급박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기 재현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개혁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임.
 - 초기에 빈번히 지적되었던 정책혼선과 우선순위 문제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개혁주체간 공감대는 미흡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늘리고 있음.
 -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도 금융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면 흑자부도를 포함한 연쇄도산 사태마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을 지지하는 실물기반이 또한번 급속히 붕괴되면서 우리경제는 자생적 회복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됨.
- 대외경제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실물부문이 과도한 투자위축과 국내외 수요기반의 붕괴라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2-3년내에 IMF이전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는 정부의 경제회복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음.
 - 정부가 기대하듯 단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2년후 효율적 자원활용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기업가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생산기반을 이루는 네트워크를 복원하여 이전의 잠재성장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몇배의 기간이 필요할 것임.
 - 적어도 1-2년간 축소경영이 불가피하다면, 동태적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보다 금융경색하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축소된 현금흐름에 적응한 생존자체가 당면과제가 될 수 있으며, 국내외시장에서 그동안 어렵게 확보한 기존시장의 적지 않은 부분을 경쟁 없이 해외기업에게 내어주게 될 것임.
- 현재와 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물기반을 무너뜨리는 축소지향적 구조개혁의

추진과 관주도적 추진방식으로는 효율적인 경제난국의 수습 및 재발방지는 물론, 막대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임.

- 난국탈피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장내에서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도와야 할 것임.
 - 크나큰 국민적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구조개혁과정의 또다른 관치경제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지대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지시와 규제 가능성이 존치되는 등, 여전히 관치경제의 여지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기본 시각하에 그간의 경제정책과 실적을 巨視, 金融, 企業, 勞動, 公共 및 對外부문 등 여섯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난국타개의 열쇠는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회복하는 것임.
 - 국내수요가 급감하는 시장여건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노력에 대한 정책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국내경기를 지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의 진행을 막는 일 또한, 기업의 동태적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임.
- * 지금은 오히려 내수진작을 위한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균형재정에 집착할 시점이 아님.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디플레경제에서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낮음.
- 어느 부문보다 독점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조직의 재편보다는 정부기능의 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의 민간부문부담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경제 각부문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지대추구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제도적 정비는 향후 외환 및 금융위기의 재현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개혁의 중요한 前提임.

2. 거시부문

가. IMF 합의와 고금리 긴축정책의 문제점

- 외환시장의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축 통화, 재정정책을 정책기조로 함.
- IMF 관리체제 이후 가용외환보유고의 대폭 증가와 함께 환율이 하향안정되는 등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외환시장의 안정 이외에 다른 거시경제환경은 80년 이후 가장 열악한 상태임. 고금리 긴축정책의 지속으로 고실업, 고부도, 고물가의 불황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성장잠재력 까지 위협받고 있음.

<표 20> 주요 거시지표 추이

	97		98				
	11	12	1	2	3	4	5
환율(월평균)	1,035	1,494	1,707	1,628	1,489	1,392	1,399
가용외환보유고	73	89	124	185	242	308	343
산업생산	4.3	3.0	-10.8	-1.8	-10.1	-10.8	-
도소매 판매	1.0	-4.9	-8.7	-11.4	-11.2	-15.0	-
설비투자	-14.9	-20.6	-31.8	-26.2	-36.7	-48.6	-
주가(월말)	408	376	567	559	481	421	337
부도율	0.38	1.49	0.53	0.62	0.47	0.42	-
실업률	2.6	3.1	4.5	5.9	6.5	6.7	7.0*
물가상승률	4.3	6.6	8.3	9.5	9.0	8.8	8.2

주: *는 전망치

자료: 재경부, 한국은행, 통계청

- 고금리로 인한 저축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국내채권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그다지 많지 않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미약한데 반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고 경기불황을 심화시켜 산업기반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심각함.
-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집중되고 있어 고금리를 통한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미미한 상태임.

<표 21> 외국인 투자자금 추이

(기간중, 억불, %)

	97. 12	98.1	2	3	4	98.1~4
주식투자 순유입액	3.2 (76.2)	9.5 (100.0)	15.3 (85.5)	6.1 (48.8)	1.3 (-)	32.2 (85.0)
채권투자 순유입액	1.0 (23.8)	0.0 (-4.6)	2.6 (14.5)	6.4 (51.2)	-3.3 (-)	5.7 (15.0)
계	4.2	9.5	17.9	12.5	-2.0	37.9

주: ()내는 구성비율

자료: 한국은행

나. 정책 과제

- 매월 30억불 이상의 경상수지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금리 긴축정책은 기업의 연쇄도산,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산업의 기반을 잠식시키고 있을 뿐 긍정적인 효과가 미약하므로 즉각적인 완화조치가 요구됨.
- 적정의환보유고 초과 적립분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악순환의 경제상황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기폭제로 삼아야 함.

<표 22> 98년중 외환보유고 목표(4차 IMF 합의내용)

(억불)

	1/4	2/4	3/4	4/4
가용외환보유고	200	320	340	410

주: 1/4~2/4: 이행기준, 3/4 ~ 4/4: 예시한도

자료: 재경부

- 외환위기와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제조업가동율제고가 필수적이며, 수출활동 정상화를 위한 무역금융 활성화가 시급함.
-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보다는 SOC에 대한 적정투자를 통하여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자금의 지출이 요구됨.

3. 금융부문

가.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다각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였으며, 6월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IMF구제금융신청 직후부터 고금리정책, BIS기준 부과,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금융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침체 및 금융경색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의 도산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치중함으로써 기업대출이 축소되어 금융경색이 가중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원칙 없는 자금지원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권에 총 15조 7천억원을 지원하였으나 1/4분기중 은행의 대출은 오히려 10조원 감소
 - 또한 비용부담(loss sharing)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책임경영 행태가 보이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재무약정체결, 부실기업판정 등 “은행을 통한 기업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관치금융, 관치경제 강화가 우려되고 있음.
- 한편 정부내에서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산업은행의 새한중금 인수 발표, 은행의 협조융자 지원 등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나. 개선 방안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금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임.
- 지금 같이 금융경색이 지속되는 한 실물경제의 악화는 심화되고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많은 기업은 구조조정하기도 전에 도산하게 될 것임.

- 적기시정조치 이전에라도 은행간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은행 대형화 및 은행의 신용공급능력을 확충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국책은행과 이미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은행간 합병 추진
 - 합병시 정부의 증자참여 등의 유인책으로 일반 은행간 합병 유도
 - 국내 실물자본의 은행산업진출을 허용하여 은행 M&A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구매자 우위의 상황을 개선하고 외국은행의 M&A 참여를 유도
- 부실기업 조기퇴출과 함께 잔류기업에 대한 채무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을 시급히 추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부도를 방지
 -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에 대한 단기채무의 장기 전환, 일부채무의 주식 전환(debt-equity swap) 유도
- 관치금융 근절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은행경영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부실채권 정리, 자본투여 등 자금지원만 하는 경우 은행대출결정에 언제든지 정부 및 정치권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으며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
 -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은행법상의 비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여 은행경영을 자율화하고 은행산업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비교적 우량하다고 판별된 금융기관과 합병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 자금지원시 감자, 경영자교체, 임금삭감 등 비용분담 원칙 적용
 - 폐쇄되거나 합병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부족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자금회수를 추진하고 대주주, 임직원 등의 탈법행위 적발 강화
-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외국인 매각 대상을 서울·제일은행에서 국민, 주택은행 등 우

량은행으로 확대

—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한계 비은행금융기관의 조기 정리

-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정리는 P&A(Purchase and Assumption) 방식에 의해 퇴출을 유도

4. 기업구조조정 정책

가. 현황과 평가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획기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함.

< 표 23> 기업구조조정 정책

기본방향	주요내용
1)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 재무정보 공시 및 회계기준 및 관행의 국제화 ○ 부실경영 은폐방지를 통한 금융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신인도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간 자금 및 영업지원 관행 단절하여 기업의 재정적인 독립강화 ○ 계열기업의 부실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안정성 유지
3)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제고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 불필요한 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매각으로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정착
4)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만한 다각화를 탈피하고 주력 핵심사업으로 집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등 수평적인 협력 관계강화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자산의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 경주 ○ 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경영진 퇴진등 책임강화

—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 실효성 미흡, 정책혼선 및 정책환경 미성숙 등 정책보완의 필요성도 많음.

㉠ 정부의 과도한 개입

— 상호채무보증 해소문제를 그 발생원인인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과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법적 타당성을 뒷받침해온 지주회사의 불인정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여 인위적이고, 급격한 개선을 요구

— 협조유자로 인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개입에 의한 협조유자의 남용으로 인해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및 시장경제원칙의 상실로 경제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채권은행단 입장에서 기업의 도산보다는 협조유자를 해줄 경우 단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아서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협조유자라는 편법을 통해 임원진의 책임회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이 망할 경우 부실규모의 증대, 국민부담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 구조조정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정작 필요한 곳으로 재원이 집중되지 못하며,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부실기업정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추진방식, 급격한 추진속도와 절차는 관치경제의 폐해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음.
- 부실기업 퇴출과정이 정부주도의 추진방식, 급격한 추진속도와 절차에 의해 시장경제원리가 퇴색되어 관치경제로 인한 정부실패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음.
- 부실기업판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간의 부실판정기준 불일치, 부실기업의 업종특성과 재무상태에 대한 차이 등이 무시됨.

㉠ 실효성 없는 정책의 추진

- 기초실 폐지후 구조조정본부, 경영전략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CEO협의회 등 대체조직이 신설되어 변형된 기초실 기능이 존속함.
- 지나치게 엄격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부채비율 100% 이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하에서 지주회사설립 가능성 있는 대기업은 많지 않음.

㉡ 정책혼선

- 부채비율축소와 사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금감위, 재경부, 청와대 등 경제관련 부처간 정책혼선이 노출된 바 있음.
- 기업구조조정 방법에 있어서도 주어진 제도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다는 “시장경제원리의 강조”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는 정부개입의지가 혼재하고 있음.

㉢ 정책환경 미성숙 및 급격한 구조조정

- 급격한 부채비율축소는 증시기반 취약, 부동산매각 곤란,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의 지속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의 지배”에 바탕을 두고 작성될 결합재무제표는

미국기준보다 결합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며, 아직까지도 작성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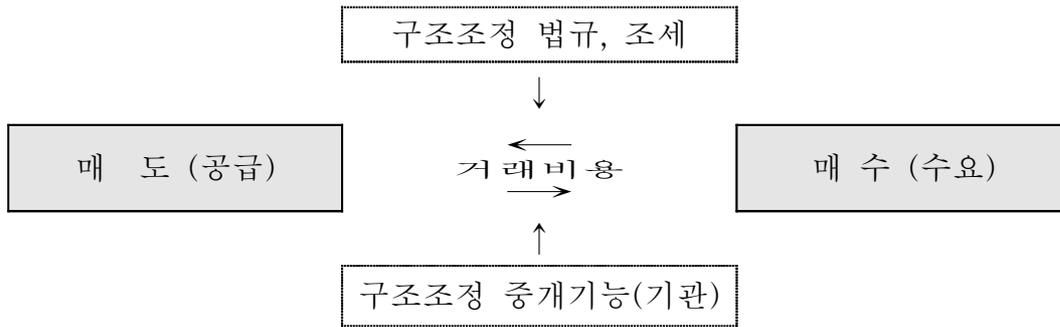
- 기업분할제도와 미비, 원활한 기업퇴출제도 미비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속에서 재무구조개선협정의 체결, 부실기업판정 및 정리속도 등에서는 조급성이 나타나고 있음.

나. 정책의 보완과제

- 분야별로 “시장주도”와 “정부주도”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 환경을 조성
 - 구조조정 성과나 속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시장혼란을 최소화

- 기업 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보완
 - 기업인수합병, 분할,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8년2월 구조조정촉진대책 보다 강력한 세제감면 및 절차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
 - 지주회사설립 요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의 적용에 있어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

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



—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

- 부실기업(한보, 기아) 처리를 조속히 완료하여 다른 대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함.
- 무원칙한 협조요자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실세금리 이상이 금리적용, 은행의 대손충담금 설정 등의 비용을 부과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부실판정위원회” 설치와 시한부 집단퇴출같은 一過性 퇴출보다 필요시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퇴출을 단행하는 것이 시장혼란을 최소화

5. 노동부문

가. 현황과 평가

㉠ 고용조정

- 정리해고 요건으로, 경영상의 이유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포함시켜 일견 정리해고가 보다 용이해짐.
- 그러나 정리해고조항의 표제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으로 바뀜으로써 해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짐.

-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코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지난 3월에 노동부장관의 ‘일시에 30% 이상 해고하면 위법 처리하겠다’는 발언 및 27만명의 대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라는 권고 등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음.

㉠ 근로자 파견법

- 파견업무 및 파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이미 이에 종사하는 약 10만명가량의 파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됨.
- 사용기업은 2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고실업시대에 2년마다 실직하게 됨.

㉡ 실업대책

- 정부는 실업자수 약 130만을 상정하여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 실직자 생계보호에 치중되어 실업의 해결은 고사하고 재원의 고갈 및 실업의 장기화만 초래할 우려 있음.

<표 24> 실업대책 예산규모와 조달계획

(억원)

주요 사업		조달 계획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재원	49,951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13,655
- 고용안정 노력지원	4,512		
- 직업안정기능 보강	460		
- 일자리 창출	10,300		
- 직업훈련 확대	6,254		
- 실직자 생계보호	28,425		
공무원 봉급삭감재원	11,119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포함)	21,415
- 공근로사업	5,119		
- 실업자생계보호	2,000	비실명채권	16,000
- 생활안정자금융자	2,000		
- 직업훈련확대	1,000		
-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재원	17,950	IBRD 차관 등	27,950
- 한전송배전시설투자	6,000		
- 외화표시대출금 상환연장	7,950		
-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지원	1,000		
-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	3,000		
합 계	79,020	합 계	79,020

㉔ 노사정 대타협

-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 대타협은 근본적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언으로 끝나 결과적으로 근로자만이 모든 경제위기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인식을 초래함.
 - 정치권 및 정부의 개혁은 요원해 보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업자 문제만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업자들은 실업자 동맹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민노총은 5월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시한부 총파업에 나섬.

나. 정책 과제

㉑ 고용조정

- 정리해고 요건으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해고 기준 및 노조와의 성실한 협

의 등 애매모호한 문구를 보다 구체화시켜 이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시켜야 함.

- 또한 노동부 장관에의 사전신고는 사후적 감독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근로자 파견법

- 파견업무와 파견제도의 운영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며 파견업체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훈련사업까지 확대케 해 인력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인력업체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함.

㉡ 실업대책

-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
 - 정부가 나서서 실직자를 보호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소극적 대책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고용의 유지는 물론 고용을 창출케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 노사정 대타협

- 정부와 업계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정치권, 정부 및 기업의 고통분담을 유도함.
 - 정부는 정치권 및 정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재벌의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 그러나 정부는 제2기 노사정 위원회 구성에 앞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됨.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당해기업 처벌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는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임.
 - 경영참가법 제정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구는 실질적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 대한

월권행위임.

- 비록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 등의 실행행사를 했을지라도 시설파괴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함. 국민 대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소송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6. 재정 및 공공부문

가. 재정 · 공공부문의 주요 개혁과 문제점

㉠ 주요 개혁의 내용

— 정부조직개편 : 「2원 14부 5처 14청」 → 「17부 2처 16청」

- 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세법 개정 : 예산규모 75조원 → 73조원

-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는 국민총생산 대비 -0.8%(3.6조원) 예상
-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3.6조원을 부담

<표 25> 추경예산 조정내역 -재원소요 및 대책

(억원)

재 원 소 요		재 원 대 책	
○ 세입감소	68,260	○ 세수증대	39,990
		- 유류관련세율인상 등	36,990
		- 부가세 면세축소 등	3,000
○ 금융구조조정지원	36,000	○ 세출삭감	84,852
○ 환차 등 증액소요	20,582	- 인건비 동결	5,124
		- 행정경비절감	5,194
		- 사업비 삭감	74,534
계	124,842	계	124,842

자료 :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정·예산·공공부문의 개혁방향 설정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세제 및 세정 개혁
- 공공부문 혁신

— 재정을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조달계획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50조원 채권 추가발행 (직접이자비용은 1998년 중 3.6조 원, 1999년 중 8~9조원 예상)
- 실업대책을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를 7.9조원으로 예상

<표 26> 정부보증채권의 발행 계획

(조원)

	정부보증채권		추가발행	총계
	기발행	미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7.5	11.5	13.5	32.5
예금보험기금채권	6.5	5.5	19.5	31.5
합계	14.0	17.0	33.0	64.0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자료, 1998. 5. 20.

㉠ 문제점

— 정부·공공부문 개혁의 실천전 의지 결여

- 국가운영을 통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든가, 행정체계를 공무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또다시 방향제시에 그치고 실천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 재정의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예산규모에 육박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예산외 예산」으로 사용하여 왔고, 정부산하단체를 양산

<표 27> 정부산하단체의 현황

(천명, 조원)

	단체수	인원	예산
출연기관	101	42	14.4
투자 및 출자기관	32	201	99.5
보조기관	194	61	10.0
자회사 등	225	82	19.2
합계	552	386	143.1

주: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거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 재정정책을 후순위로 한 채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부문을 지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

— 구조조정비용 등의 조달 문제

- 현재 채권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50조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에는 한계
- 실업문제 종합대책은 기존 예산사업을 재구성하고 일부를 추가한 것에 불과

나. 정책 과제

—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자구 노력

-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와 공공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및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용마련을 위해 정부에 의한 국내외 재원의 (직접적인) 조달과 (인위적인) 배분보다는 민간부문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재원확보가 바람직함.

— 정부의 채권발행과 한국은행 등의 인수 추진

- 채권시장의 정상화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채권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특히 한국은행의 직접인수 또는 연·기금을 통한 매입이 고려되어야 함.

— 한시적인 적자재정 추진

- 경직성 경비의 증액제한, 재정운용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세출구조의 탄력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
- 금융부문의 문제와 경기 하강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으로 장기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하에서는 기존의 균형재정 운영의 원칙을 일시 유보하고 한시적인 적자재정 고려

— 공기업 매각과 해외자본의 유치

-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조기 실시하며, 매각 대상을 굳이 국내 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외 자본의 유치도 적극 추진
- 민영화를 전제로 공기업 자산을 근거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을 추진

7. 대외부문

가. 환율안정과 외환보유고 확충 및 국가신인도 제고

㉠ 현황과 평가

— 외환위기의 초기단계 수습에 일단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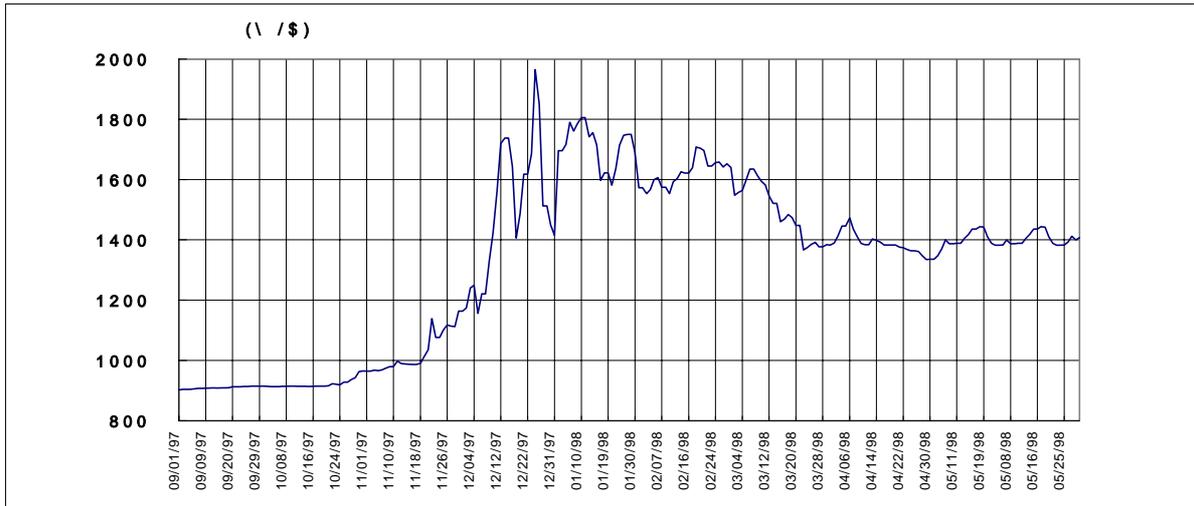
- IMF등으로 부터의 구제금융유치에 성공, 단기외채의 중장기전환 협상타결, 외평채 발행의 성공(환율: 1400원대 안정, 5월말 가용외환보유고: 343.5억불)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재현가능성 상존

- 대내적 요인: 금융 구조조정 지연, 부실기업의 정리지연, 노동시장의 불안 등
- 대외적 요인: 엔화약세, 위안화 평가절하가능성, 인도네시아 정치불안사태 등

* 무디스와 S&P의 국가신용등급도 아직 투자부적격대상에 머물고 있음.

<그림 11> 환율변동 추이



자료 : 한국은행

㉔ 향후 정책과제

- 환율안정과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급선무
 - 외국인투자는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
 - 따라서 수출증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외환보유고 확충-> 2년내 외환보유고 1,000억불 달성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자본자유화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㉕ 현황과 평가

- IMF와의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채권시장에의 외국자본 유입은 크게 늘지 않음.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매우 부진 (금년 4월까지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9.4%나 감소)

<표 28>외국인 투자 동향

(억불)

	'93	'94	'95	'96	'97	'97.1~4	'98.1~4
금액	10.44	13.17	19.41	32.03	69.07	36.87	11.38
증가율(%)	(16.8)	(26.2)	(47.4)	(65.0)	(115.6)	(586.6)	(-69.4)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재정경제부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실질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조치는 KOTRA 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뿐임.

㉠ 향후 정책과제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정리 문제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관련 정책들을 시장 원리에 맞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함.
- 이를 통해 고비용구조 해소 등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은 외국인기업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국내투자기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함.
 - 주요 선진국과 주변경쟁국 중에 외국인 만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음.
 - One-Stop Service를 담당하는 기관에 전적인 권한을 주어야 함.
- 새로운 외환거래법에 의한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더욱 앞당겨 실시해야 함.

다. 경상수지흑자 및 수출확대

㉡ 현황과 평가

- IMF체제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수입감소에 기인한 비정상적인 무역흑자기조에 의한 것임.

- IMF이후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5월중 감소세(-2.6%)로 반전되어 수출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출단가 하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감소가 수출부진의 요인임.
- 무역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SEAN지역에서의 수출환어음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한은의 매입외환어음 잔액이 감소하여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
-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부활하고 국책은행의 무역금융기능확대를 논의하는 등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딤.
- 수출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의 전대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출입금융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음.
-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8월말 이전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불 규모의 차관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현가능성은 아직 불투명

㉔ 향후 정책과제

- 수출입금융의 확대
 - 외환보유고목표 초과액 중에서 50억불 규모(추후 외환보유고 증대시 100억불로 확대)의 수출입 결제용 외화자금확보가 우선 필요
 - 무역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무역금융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붕괴된 무역금융 시스템의 부활 필요
 -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외 각국의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신용을 추가확보(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 전대차관 도입은 이미 성사)
-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기능확충 방안 조기시행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정부의 보유주식 출자)하여 상업금융 기능 확충 및 무역 관련 여신기능 확대
 - * 산업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한국은행에서의 재할인 허용
 - * 수출입은행의 단기 무역금융업무 취급 허용 (현재 6개월 이하의 무역금융 취급 불허)
 - *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에 수출금융 지원용 외화자금 일부를 배정하고 무역금융 취급 특별창구 개설

-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총력수출지원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함.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4/22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 폐지(5월1일시행)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총액한도대출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을 폐지 ○ 무역금융 용자한도 및 용자비율 자율화(5월1일시행) - 한국은행의 별도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던 총액한도대출대상 무역금융의 용자한도와 용자비율을 앞으로는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신용장내도액, 기업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4/23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취급규정',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5월1일시행)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취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어음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용자대상어음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기한부수출환어음 및 DA방식 수출환어음으로 한정 -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이율에 대한 사항을 '수출환어음담보대출취급규정'으로 이관
4/27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5월1일시행) -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들에 대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형태로 외화자금 지원 - 동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은 총 3억달러 범위내에서 1년간 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4/30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금 상환유예(5월1일시행) - 상환유예대상: 한국은행보유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외화대출금 중 5월1일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대출금 약 7억달러 - 상환유예기간: 1년(당초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후 상환)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구조개혁기획단 설치(발족일 5월5일 이전) - 기능: 구조개혁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금융시장 및 기업동향 파악, 수립계획의 실천 총괄, 비상대책 마련 등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6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 - 전면개방(11업종):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기타 해상운수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신용조사업(98.7.1), 원유정제처리업(98.8.1) - 부분개방(2개업종): 담배제품제조업(98.7.1), 도박장운영업(99.5.1) - 개방범위확대(7개업종): 발전업, 신탁회사,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99.1.1)
5/7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보유인허율 상향조정(98.5.23시행)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상향조정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자금인출 및 2/4분기 의향서 내용 발표 - 한국정부와 IMF는 거시경제지표 현실화, 재정적자 추가 확대, 통화금리정책 신축성 확대 등에 합의 - IMF는 98.5.2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정부와 합의된 한국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8억불 규모의 제6차분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총 지원예정액 210억불 중 169억불(81%)이 지원됨
5/18	은행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상시점검반' 설치 운영 - 자금경색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이 금융수혜과정에서 겪게되는 각종 금융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은행감독원 검사통할국내에 5.15일부터 '상시점검반' 설치 운영중
5/1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기관(Morgan Stanley)과의 계약체결 - IMF와의 매각합의시한인 98.11.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가 추진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21	한국은행	<p>○97년 기업경영분석결과 발표</p> <p><재무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말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396%(96년말 317%) - 자기자본비율:20%(96년말 24%) <p><수익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노력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대규모 환차손과 금융비용증가로 경상이익은 적자로 반전
5/22	한국은행	<p>○98년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국내총생산은 높은 수출신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금감위	<p>○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시현장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5일부터 여수신금리 인하, 중소기업대출금 만기연장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전 금융기관 창구에 대한 무기한 상시점검에 착수
5/27	재정경제부	<p>○‘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5.28일 부터 20일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 법안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 채권양도시 공고,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 기타 자산유동화 제한에 대한 특례 인정 등
6/1	재정경제부	<p>○고려증권, 동서증권 증권업 허가 취소(6.1일자로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증권사는 자동해산하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에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예정임
6/5	재정경제부	<p>○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98.7.1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98.8.1일부터 시행) · 은행 및 증권사 발행RP, 보증보험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 예금보험료율 인상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12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길종금 업무정지(98.6.12-7.31) 명령 - 98.6말 이전에 300억원 증자가 이루어져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6.5%를 초과하고, 외부의 자금지원없이 예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정지 해체여부를 검토할 예정
	은행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예대상계 실적 및 향후 지도방안 발표 - 98.5.25일부터 2주간에 걸쳐 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모든 예, 적금과 대출금을 상계토록 지도 - 예대상계실적:1조 9,895억원
6/13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감독규정’개정 - 주요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실태평가결과에 의한 시정조치 발동요건을 객관, 명료화하는 등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개선 ·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관리제도 폐지 · 모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비상임 임원겸직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투자신탁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6.15일시행) - 투자신탁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보수율의 조정(보수율의 상한성폐지 및 하한선 인상) · 단위형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연장 제도 폐지 -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회사의 동일종목 주식소유한도 확대(5%→10%) · 투자신탁약관승인기한명시(30일)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전년 동 기 대 비 (%)					
1991년	9.1	9.1	6,757	9.5	8.5	12.6	12.1	13.0
1992년	5.1	5.1	7,007	6.6	7.6	-0.8	-1.1	-0.6
1993년	5.8	5.0	7,484	5.7	3.0	5.2	-0.1	8.9
1994년	8.6	10.5	8,467	7.6	4.2	11.8	23.6	4.5
1995년	8.9	10.8	10,037	8.3	1.0	11.7	15.8	8.7
1996년	7.1	7.4	10,543	6.8	7.8	7.1	8.3	6.1
1997년	5.5	6.2	9,511	3.1	5.7	-3.5	-11.3	2.7
1997년1/4	5.7	5.7	-	4.2	5.1	0.3	-0.2	0.8
2/4	6.6	7.2	-	4.8	6.9	0.2	-1.8	1.8
3/4	6.1	7.5	-	4.8	7.2	-3.7	-12.7	3.8
4/4	3.9	4.6	-	-1.0	4.0	-9.8	-28.2	3.7
1998년1/4	-3.8	-6.4	-	-10.3	-4.3	-23.0	-40.7	-7.7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1년	718.7	10.5	815.2	16.7	-68.0	-83.2	137.3	760.8
1992년	766.3	6.6	817.8	0.3	-17.6	-39.4	171.5	788.4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202.6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56.7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7	-230.1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8.8	-86.2	88.7	1,415.2
1997년10월	124.6	5.2	125.9	-7.0	-1.8	-6.6	223.0	965.1
11월	118.3	3.8	117.1	12.4	4.6	4.8	72.6	1,163.8
12월	124.3	1.7	102.2	-24.9	24.0	34.6	88.7	1,415.2
1998년 1월	90.1	-0.3	75.3	-39.8	20.5	30.5	123.6	1,572.9
2월	112.2	19.9	80.1	-30.2	38.3	39.1	185.4	1,640.1
3월	120.7	6.6	83.7	-35.9	37.2	36.5	241.5	1,378.8
4월	121.5	6.6	82.4	-35.6	38.3	38.1	307.6	1,338.2
5월	114.4	-2.6	76.7	-37.5	-	-	343.5	1,407.0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입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1년	4.7(1.9)	9.3(9.2)	2.3	16.9	18.6	24.5	18.9	657.1
1992년	2.2(1.6)	6.3(4.6)	2.4	15.7	18.4	24.7	16.2	587.2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3	15.3	13.4	652.9
1997년10월	2.1	4.2	2.1	5.5	17.9	13.0	12.5	584.1
11월	2.9	4.3	2.6	2.4	18.5	13.3	14.1	494.1
12월	10.9	6.6	3.1	-12.6	21.1	14.7	24.3	390.3
1998년 1월	15.2	8.3	4.5	7.8	16.1	12.6	23.4	475.2
2월	17.7	9.5	5.9	-13.7	13.8	10.4	19.8	525.2
3월	17.5	9.0	6.5	-0.7	13.9	9.6	19.0	523.0
4월	17.5	8.8	6.7	-	13.3	9.2	18.1	444.2
5월	15.7	8.2	7.0*	-	15.1	8.6	17.9	-

주: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 업	평균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 계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1년	9.6	79.5	8.9	11.3	2.2	19.0	22.0	-9.7	6.7	-16.7
1992년	5.9	78.3	5.5	5.3	-5.2	-10.6	9.0	-10.0	-12.4	-7.4
1993년	4.4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7.3	81.8	7.0	5.9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8	79.9	3.2	-1.5	3.3	-22.8	4.7	-0.4	-26.2	2.6
1997년11월	4.3	77.3	1.0	-4.2	-33.6	-39.7	-23.3	3.2	-39.9	-1.5
12월	3.0	76.1	-4.9	-9.2	-10.0	-50.0	-35.1	18.3	-25.0	31.0
1998년 1월	-10.8	67.8	-8.7	-18.5	-31.1	-56.3	-19.3	-16.8	-65.9	12.2
2월	-1.7	68.8	-11.4	-18.4	-28.0	-46.4	-19.9	-7.3	-62.9	9.8
3월	-10.1	65.4	-11.2	-22.0	-50.6	-55.2	-29.6	-38.6	-71.6	-24.0
4월	-10.8	68.3	-15.0	-24.4	-47.0	-54.1	-58.6	-58.1	-69.5	-52.6

주: 4)내수용 5)내수용,선박제외 6)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